

일본이 바라보는 한국전쟁:

일본 역사교과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박태균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2001년 후소사의 새로운 역사교과서가 검정을 신청하면서 일본의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논쟁이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논쟁이 후소사의 교과서만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짐으로 인해 일본의 다른 역사교과서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나마 한 일관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검증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일본 역사교과서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나타나는 한국전쟁에 대한 서술을 분석했다. 한국전쟁에 대한 설명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한국전쟁이 일본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서술이 이루어졌다. 교과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한국전쟁으로 인한 일본의 전쟁 특수, 전쟁 기간 중에 이루어진 일본의 재무장화와 레드퍼지, 그리고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대한 내용을 공통적으로 다루어졌다. 아울러 일부 교과서에서는 한국전쟁과 관련된 부분에 미군이 오키나와에 기지를 사용하도록 허용한 것에 대한 천왕의 책임문제, 그리고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일본의 역사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한국전쟁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역사교과서는 공통적으로 외인론적인 관점이 강하다는 문제가 있다. 즉, 이 시기 일본의 정치·사회가 안고 있었던 문제의 책임을 대부분 미국의 정책에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점령 정책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일본의 보수 정치세력 역시 문제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역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는 과거의 문제에 대한 진정한 교훈을 얻어내는 것이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일본 역사 교과서, 한국전쟁,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일본의 재무장화, 레드퍼지, 후소사

* 본 논문은 동북아 역사재단의 자료 지원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동북아 역사재단의 내부용 보고서로 제출된 내용을 보완·수정한 것이다.

I. 일본 역사 교과서 논쟁

동북아에서 일본의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19세기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근대화 성공한 이후 전개한 팽창주의적 정책이 다른 주권 국가에 대한 침략으로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역사교과서에서는 이러한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거나 서술하지 않음으로서 과거를 왜곡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1982년 처음 시작된 일본의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논쟁은 1986년 『신편 일본사』(原書房)의 축소·은폐를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졌고, 2001년에는 일본의 보수 우익 세력들에 의해서 발간된 후소샤의 새로운 역사교과서가 발간되어 2005년 검정에 통과되면서 한·중·일 간의 외교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되었다(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 편, 2002). 후소사에서 발간한 역사 교과서의 경우 한일 양국의 비정부 시민단체의 활동과 일본 내에서의 광범위한 비판으로 인해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교과서로 채택되지 못했지만, 일본 역사 중 침략주의적인 부분을 왜곡 또는 축소함으로써 많은 논쟁을 유발시켰다.

한국의 경우 다양한 시민단체와 학술단체를 통해 후소샤의 역사교과서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졌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을 비롯한 국가 기관에 의해 후소샤 교과서의 내용에 대판 비판이 이루어졌고,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 역사문제연구소, 한국역사연구회와 같은 학술단체에서도 후소샤가 발간한 교과서에 대한 학술적인 검토와 비판을 위한 ‘교과서 분석 심포지엄’이 개최되기도 했다(2005년 4월 11일). 이러한 대응과 함께 한국의 역사교과서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도 이루어졌다(임대식 외, 2002).

후소샤의 역사 교과서 검정 통과를 계기로 하여 국내의 몇 개 기관과 단체에서는 검정에 통과한 일본의 역사 교과서 전체를 분석하는 글이나 자료집들이 발간되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한국 관련 내용 변화 분석 연구』(2005), 아시아 평화와 역사교육연대의 『2005년 검

정통과 일본교과서 주제별 분석 자료집』(2005), 그리고 한국사연구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일본 중학교 교과서의 역사서술과 역사인식』(2005) 심포지엄 자료집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 역사교과서에 대한 대응과 검토는 몇 가지 점에서 문제를 갖고 있다. 첫째로 주요 언론들이 후소사에서 발간한 교과서에 대한 내용만을 집중적으로 다룸으로써 인해서 일본의 검정 교과서들이 모두 후소사 교과서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점이다. 물론 검정에 통과하여 일본에서 사용되는 역사교과서에 대한 학술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한국 사회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인식은 한국 내 주요 언론들의 ‘감정적’인 접근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둘째로 검정에 통과한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대한 학술적 검토 역시 문제가 적지 않다. 학술적인 검토는 주로 민족주의적 역사관에 입각해서 역사상 한일관계에서 일본의 ‘침략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일본의 검정 역사교과서들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한국 내에서도 역사적인 평가와 관련해 민감한 부분에 대한 일본 검정 역사교과서에 대해서는 분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¹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역사교과서에서조차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는 ‘한국전쟁’이나 ‘한일협정’에 대한 부분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검정 역사교과서가 다루고 있는 한국 관련 내용들에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만, 본고에서는 일단 ‘한국전쟁’에 대한 서술을 검토하고자 한다.² 본고에서 특히 한국전쟁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전쟁특수가 일본

1. 김성보의 글(2002)이 한일관계를 넘어서 일반적인 현대사 인식에 대해 분석한 거의 유일한 연구성과이다.
2. 한국전쟁이 일본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일본 내에서의 인식에 대한 문제의식은 2002년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에서 있었던 심포지엄에서 시작되었다. 필자는 위 심포지엄에서 ‘한국전쟁과 1950년대 미국의 아시아 정책 변화’라는 제하의 발표를 했고, 여기에서 한국전쟁이 일본의 전후 부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런데 이 자리에 함께 참석했던 일본 자위대 소속의 일부 연구자들은 한국전쟁이 일본의 전후 부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면서 필자의 발표 내용에 대해 비판하였다. 한국전쟁 특수가 일본의 경제부흥에 미친 영향은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봐야 할 중요한 연구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의 경제부흥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인식인데 반해,³ 일본 내에서는 전쟁특수의 영향에 대해 이미 한국전쟁 당시부터 논쟁이 되었기 때문이다.⁴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국전쟁과 함께 한국전쟁이 일본에 미친 영향 — 전쟁특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재군비 등 — 에 대한 일본 역사교과서들의 서술을 분석하도록 하겠다.⁵

II. 한국전쟁 관련 서술의 내용

1. 한국전쟁 자체에 대한 서술

대체로 한국전쟁과 관련된 서술은 독립된 장을 이루지 않고 앞뒤로 세계사적인 내용, 그리고 일본현대사에서 중요한 내용들과 맞물려 함께 서술되고 있다. 즉, 한국전쟁의 앞 부분에는 그 배경으로 냉전의 격화와 한반도의 분단, 그리고 세계적 차원의 냉전이 한국전쟁으로 이어졌다고 서술되어 있다. 그리고 한국전쟁의 뒷부분에서는 전쟁 기간 중에 이루어진 샌프란시스코 강

-
3. 일본의 전쟁 특수문제는 언제부터 한국 사회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을까? 이는 또 다른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전후부터 일본이 경제성장을 거듭하면서 일본의 전쟁 특수 관련 사항들이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중적으로 확산된 것은 베트남 전쟁 시기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게 베트남에 전투부대를 파병하는 조건으로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요구하였는데, 이 때 미국 정부가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자, 한국 정부는 일본이 한국전쟁에서 얻었던 이익만큼 한국도 베트남전쟁으로부터 이익을 얻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러한 한국정부의 견해는 베트남 전쟁에서 전투부대를 파병한 한국보다 아무런 병력도 파견하지 않은 일본이 더 많은 이익을 얻고 있다는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박태균, 2006: 296-297).
 4. 미군의 보급품을 위한 전쟁 특수가 일본의 경제부흥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었다(金森久雄, 2007). 이 문제는 앞으로 좀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한 연구 과제라고 생각한다.
 5. 한국전쟁에 대한 서술이 소략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후소야의 『새로운 역사교과서』(중학 역사)는 다루지 않았다. 『새로운 역사교과서』에서는 한국전쟁에 대해 간략한 소개(한 단락)와 함께 ‘조선특수’가 경제부흥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간략한 서술만이 있다. <http://www.je-kaleidoscope.jp/korean/pdf/fusou5kr.pdf>

화조약에 대한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전쟁에 대한 서술은 매우 간략하게 이루어져 있다. 북한⁶의 남침에 대한 기술과 함께 한국의 역사 교과서에서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전쟁의 전개과정에 대한 간단한 서술이 이루어져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전쟁의 전개과정을 간략하게 보여주는 지도 - 한국의 역사교과서에 있는 한국전쟁 관련 지도와 거의 유사하다. - 를 함께 싣고 있다.

그런데, 한국전쟁의 개전과 관련된 간단한 서술 속에서 주목되는 두 가지 점이 있다. 하나는 일부 교과서에서 북한의 남침뿐만 아니라 이승만 정부에 의한 호전적인 발언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다.⁷ 또한 여기에 더하여 『고교일본사 B: 신정판』(짓교출판)에는 ‘1950년 5월의 총선거에서 참패했던 이승만 정권이 국내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북진통일을 주장했다’(216-217쪽)는 점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전체 분량에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배경 부분에서 남한 정부의 책임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⁸

둘째로 전쟁의 전개과정에서 전쟁 발발 이후에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전선이 다시 전쟁 이전의 38선 부근에서 교착상태에 이르게 되며, 2년이 지난 후에 ‘간신히’ ‘휴전협정’을 체결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간신히’라는 표현 속에서는 2년간이나 계속된 정전회담의 과정을 담고 있다.⁹ 비록 단순한 언급이지만, 한국전쟁 기간 중 정전협상의 중요성을 거의 간과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정식 명칭 뒤에 일본에서 통칭되는 ‘きたじょせん(北朝鮮)’이라는 용어를 병기하고 있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한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7. 『일본사 A: 개정판』, 산세이도, 139쪽.
8. 1950년 5월 30일의 제2대 총선거에서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했던 중간파들이 참여·당선되었기 때문에 이승만 정부에게 정치적 위기로 인식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서 북진통일 발언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통일 발언은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1949년 6월부터 계속되었다. 그리고 이 발언이 실질적인 의지를 보여준 것인지, 주한미군의 철수를 막고 국민통합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수사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쟁이 진행 중이다(서중석, 1995).
9. 『고교일본사: 일본사 B』, 야마카와출판사, 279쪽; 『고등학교 일본사 B: 100개의 테마에 의한 통사와 다각적 시점의 역사상』, 시미즈쇼인, 230쪽; 『개정판 일본사 A』, 야마카와출판사, 223쪽.

하고 있는 한국의 교과서에 비하여 오히려 핵심적인 부분을 간략하게 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공식 용어인 ‘정전협정’ 대신에 ‘휴전협정’이란 용어를 모든 교과서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되는데, 이는 한국에서 ‘휴전협정’과 ‘휴전선’이라는 용어가 ‘정전협정’이나 ‘군사분계선’보다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한국전쟁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되는 서술은 야마카와출판사의 『신일본사 개정판 일본사 B』에서 독립시켜서 서술하고 있는 ‘맥아더와 원폭’이라는 부분이다(369-370쪽).

맥아더에게는 원폭에 관련된 두 가지 흥미깊은 사실이 있다. 하나는 일본국 헌법의 제정과 연결되어 있다. 연합국 최고사령관으로서 일본에 진주했던 맥아더 원수는 원폭의 힘을 확신하고 있고, 일본의 방위에는 원폭과 미합중국 등의 점령군에서 충분히 생각하고 있었다. 그 구상은 소련과의 본격적인 전쟁이 발발한다면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일본에 철퇴시켜, 일본본토에로의 주요발착지가 되는 항구에 집결한 소련군을 원폭으로 공격하는 것에 있다. 더욱이 미합중국본토로부터의 증원의 미군과 보조를 맞추어 일본을 방위하는 것에 있었다. 맥아더 등 GHQ의 강력한 지도에 의해서 일본의 평화주의를 추진하고 있는 배경에는 냉전이 본격화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에 더해서 맥아더의 원폭관이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이 전술은 1949년에 폐기되었다.

다른 하나는 조선전쟁과의 관련에 있다. 1950년 10월 말 중국군이 본격적으로 참가하자, 일시 미합중국군(유엔군)은 총 붕괴하여 1951년 2월에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맥아더는 중국에서의 승리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원폭투하를 구상하고, 타이완의 방위에 대해서도 최악의 경우에는 버리는 선택을 배제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자세를 보였다. 이것 등은 트루먼 대통령 등 미합중국 정부의 의향을 일탈하는 것이었다. 4월 11일 트루먼은 맥아더를 일제의 직위로부터 파면했다. 원폭에 대해서는 미합중국정부도 소련이 조선전쟁에 전면적으로 참전하여 일본에 침공하여 온다면 사용을 고려하는 방침이 있었지만, 맥아더의 생각은 저들의 기준으로부터 본다면 너무 적극적인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맥아더 장군이 소위 ‘천황제’를 유지하면서 제반 개혁을 실시함으로써 일본의 전후체제를 완성시킨 사람으로 일본 내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는 반면, 이 글은 맥아더에 대해 우회적인 비판을 시도하고 있다. 원자폭탄의 유일한 피해국인 일본인들이 핵무기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음을 감안할 때 원자탄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했던 맥아더 장군에 대한 위의 서술은 진보적인 입장에서 맥아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각인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핵무기에 대한 이러한 서술은 한국의 역사교과서에 나타나는 서술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한국의 역사교과서 속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시 사용된 원자폭탄이나 한국전쟁 당시에 미국이 사용하려고 했던 핵무기에 대해 어떠한 비판적인 서술도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 나타났던 한국인들 사이에서의 불감증은 한국의 역사교과서 속에서 나타나는 핵무기에 대한 무관심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전쟁 특수와 재군비, 그리고 군국주의자들의 부활

한국전쟁 자체에 대한 서술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검인정 교과서 11권에서 똑같이 전쟁 특수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산세이도에서 나온 『일본사 A: 개정판』에서는 ‘칼럼’으로 따로 분류하여 전쟁 특수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138쪽).

조선전쟁의 발발은 전장에 가까운 일본의 정치와 경제 등에 다방면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전쟁이 시작되자, 미국은 지금까지 점령하고 있었던 일본의 국가예산을 사용하여 물자를 조달하였지만, 이것과는 별도로 미국의 부담으로 전쟁에 필요한 물자와 서비스를 민간으로부터 직접 조달하였다. 이것을 정부 조달과 구별하여 ‘특별수요(특수)’라고 불렀다. 그 내용은 물자에는 마대, 모포 등의 섬유제품, 철강재와 유지철선, 트럭 등, 서비스에는 건물의 건설, 자동차의 수리, 기계의 수리, 하역, 창고, 전신, 전화 등이었다. 이에 더하여 미소대립이 심화되었기 때문에 세계 각 국에서는 군비의 확장과 물자의 구매가 많아져, 일본의 수출도 급증하게 되었고, 금속, 기계, 시멘트, 비료, 화학약품 등이 수출량을 전년의 2배 이상으로 늘렸다.

이러한 특수에 의해 닛지 라인에 의해 심각한 불황에 빠졌던 일본경제는

호경기가 되고, 1951년에는 공업생산 등이 전전의 수준을 상회하여 1955년에는 1934~1936년의 주요한 경제지표를 상회하였다. 1950·1955년에 이르러 특수 수주고는 16억 200만 달러로 대외수지는 1953년을 제외하고 흑자가 되었다. 더욱이 전력, 철강, 해운, 석탄 등의 중점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설비투자가 이루어졌다. 또한 일본경제가 급속히 일어서면서 미국은 1952년 대일원조를 중단함과 동시에 자본주의의 일원으로서 일본에 응분의 부담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전쟁 특수에 대한 설명은 모든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야마카와출판사에서 나온 『개정판 일본사 A』에서는 ‘1951년 이후 일본 정부가 중점산업에 국가자금을 적극적으로 투입하면서 세계상 우대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활발한 설비투자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함께, 1952년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1955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일본이 가맹하면서 본격적인 전후 부흥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함께 기술되어 있다(226-227쪽). 일본의 전후 부흥을 한국전쟁 특수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기술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선전쟁을 통한 재군비의 문제 역시 모든 일본역사 교과서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자세한 서술은 아니지만, 1950년 8월 맥아더의 명령에 의해 75,000명 규모의 경찰예비대가 창설되었다는 점과 함께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사진을 함께 실고 있다. 산세이도에서 나온 『일본사 A: 개정판』에서는 경찰예비대의 창설과 함께 해상보안청의 인원 8,000명이 증원되었다는 점도 서술하고 있다(139쪽).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일본 자체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 파견된 주일미군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GHQ 사령관인 맥아더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모든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사 A: 개정판』와 『일본사 B: 개정판』(산세이도)에서는 일본의 재군비에 대하여 ‘평화, 비무장, 중립이라는 일본국헌법의 이념에 근거해서 재군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구 재벌계 기업들 역시 전쟁 특수로 인해 새롭게 재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 서술되었다(139쪽; 279-280쪽).

재군비의 문제와 함께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한국전쟁 기간 중 구(舊)

군국주의자들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한국전쟁 기간 동안 모든 공직과 매스컴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추방이 이루어진 사실(레드 퍼지, Red Purge)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만,¹⁰ 군국주의자들에 대한 사면 문제는 일부 교과서에서만 다루어지고 있다. 『일본사 A: 현대에서의 역사』(토쿄서적)는 ‘국내에서는 군국주의를 조장한 것으로 인해 미군 점령 하에서 금지되어 있던 군인과 그 유족에 대한 정부의 원호가 일본 독립 후 곧 재개’되었으며, ‘1952년에는 전상명자 전몰자 유족 등 원호법이 제정되어, 1953년에 군인은급이 부활’된 사실이 언급되어 있다(178쪽). 『개정판 일본사 A』(야마카와출판사)에서는 한국전쟁을 계기로 하여 전쟁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석방과 구군인의 공직 추방 해제가 진행되어, 이들의 많은 수가 경찰예비대로 흡수되었다는 사실을 서술하고 있다(223쪽).

전쟁에 책임이 있는 구 군국주의자들의 사면되고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비판적인 서술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를 서술함으로써 재군비 과정이 단지 평화헌법에 비추어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의 과정을 통해 전범들이 다시 등장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¹¹

3.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전후 보상 문제

일본 현대사에 대한 서술이 주가 되는 ‘일본사’ 책인 만큼 한국전쟁에 대한 서술보다는 일본이 전후 미군정에서 벗어나 완전히 독립을 얻게 되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대한 서술이 더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모든 교과서가 공히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다루고 있으며, 이 조약이 일본과 전

10. 『일본사 A: 현대에서의 역사』, 토쿄서적, 176쪽; 『고등학교 일본사 B: 100개의 테마에 의한 통사와 다각적 시점의 역사상』, 시미즈쇼인, 231쪽; 『고교일본사 B: 신정판』, 야마카와출판사, 279쪽; 『일본사 B: 신정판』, 짓쿄출판, 366쪽; 『일본사 B: 신정판』, 산세이도, 352쪽.

11. 후소에서 나온 『새로운 역사교과서』는 재군비나 군국주의자들의 부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쟁을 했던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한국전쟁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정책에 따라 배상액이 거의 감면되었으며, 중국의 대표가 초대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함께 소련이 참석했지만, 조약에 조인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기술되어 있다. 아울러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조인된 같은 날 미일 안전보장조약(일본사 교과서에는 ‘일미안전보장조약’으로 표현)이 조인되었다는 사실도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관련해서는 교과서에 따라 몇 가지 서로 다른 서술들이 주목된다. 먼저 다이이치가쿠슈사의 『개정판 일본사 A: 인간, 생활, 미래』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인해서 일본이 ‘조선의 독립을 인정하고 타이완, 미나미기라후토, 치시마 열도를 포기(放棄)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141쪽).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관련된 일본의 영토 조항들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먼저 ‘조선의 독립을 인정’했다는 것은 1965년의 한일협정의 ‘기본조약’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기본조약’에서는 1945년 이전에 맺어진 한국과 일본 사이의 조약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양국 정부는 ‘이미 무효이다(are already null and void)’라고 합의하였다(이원덕, 1996: 267-268).¹² ‘이미 무효’라는 내용에 대해 한국 정부는 조약이 체결될 때부터 무효라고 해석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미’의 시점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로 해석했다. 결국 다이이치가쿠슈사의 『개정판 일본사 A: 인간, 생활, 미래』에 있는 ‘조선의 독립’ 관련 내용은 한일협정의 기본조약 내에 있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¹³

12.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이미’에 대한 해석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로 합의하고, 양국의 의회에 서로 다른 해석을 전달했다. 결국 역사교과서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 중 하나는 과거의 역사에 대한 불완전한 합의가 그 주요한 요인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13. 한국에 대한 배상에 대해서도 배상금 대신 경제협력 자금을 주었다고 서술한 부분도 주목된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교전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금 지급을 거부했으며, 경제협력 자금임을 계속 고집했다. 이에 대해 한국과 일본 정부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나자, 양국 정부는 ‘청구권 자금’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이 문제를 마무리했다. (박태균, 2005a) 교과서에서는 이 자금이 경제협력 자금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둘째로 타이완을 ‘포기하였다’는 서술이다. 타이완은 19세기 말 일본에 의해 식민지화된 지역이다. 따라서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일본이 타이완을 잃은 것이 아니라 타이완이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것이다. 그러나 ‘포기하였다’는 표현은 일본이 타이완을 자신의 영토로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표현 속에는 일본의 국가주의적 견해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반면, 도쿄서적의 『일본사 A: 현대에서의 역사』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이후에 배상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다(177-178 쪽). 즉, 이 조약에 중국과 소련을 포함한 참전국 전체가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면강화를 요구하는 운동이 일본 내에서 일어났다는 사실과 함께 전후 처리와 전후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는 내용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일본은 버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남베트남 정부와는 배상협정을,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한국, 말레이시아, 몽골 등에 대해서는 무상의 경제협력 등의 조약을 체결하였지만, ‘배상과 경제협력’에는 일본 기업이 진출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으며, 이를 계기로 일본 기업과 정치가 사이에서의 다액의 정치헌금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사실도 기술하고 있다.¹⁴

아울러 이 교과서에서는 종군위안부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종군 위안부나 과거사 문제가 한국전쟁이나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이루어졌어야 할 배상금 문제와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한국전쟁 및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기술한 부분에서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1995년 아시아 여성기금이 설치되었다는 사실과 2000년에는 구일본군의 군인, 군속으로서 사망하거나 부상했던 구식민지 출신의 재일외국인과 그의 유족에 일시금을 지급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이와 더불어 특히 주목되는 점은 ‘세계로부터의 눈길’이라는 독자적인 페이지를 설정하여 과거사 문제에 대해 전면적으로 문제를

14. 한국의 경우 일본으로부터의 청구권 자금과 베트남 파병으로 받은 미국의 원조 자금은 1960년대 말 이후 정부와 재벌 간의 유착의 물질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그 근본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국의 역사교과서에서는 이에 대한 서술이 전혀 없다.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179쪽).

여러분들은 제2차 세계대전의 희생자로서, 일본정부에 배상과 사죄를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일본도 가맹하고 있는 국제노동기반(ILO)에는 가맹국이 관련된 국제조약을 지키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1999년의 연차보고에 태평양전쟁 중에 조선반도와 중국으로부터 연행되어, 일본의 광산과 공장으로 노동에 종사하였던 사람들의 문제가 취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독한 노동조건의 아래에서 사기업을 위해서 일한 많은 노동자를 징용했던 것은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에 위반되고”, “일본 정부는 희생자 개인에게 어떠한 대책을 취하는 것을 강력하게 기대한다”라고 하는 견해를 공표하고 있다.

이것과 같은 정도로 독일은 나치 통치하에 강제노동의 목적으로 연행되었던 사람들의 배상문제에 관하여 각국의 희생자의 대표와 독일 연방정부와의 사이에서 교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0년 3월에는 독일 측이 독일 정부 및 민간기업에 의해 공동보상기금으로부터 희생자의 각 단체 또는 개인으로 총액 100억 마르크(약 5,000억 엔)를 지불하고, 그러한 내용으로 교섭이 타결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독일의 이른바 ‘과거의 극복’에 결착이 마지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과거의 극복’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나치 지배 하에서 독일인(전투원 및 민간인)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가리키는 것, 거기로부터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중심적인 취해지는 것은 ‘범죄행위’의 사실을 증명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에게 재판과 판결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경우 그 대응을 주도했던 것은 시민에 있고 사법당국에는 없었습니다. 1985년 이후가 되면 국가의 대표와 정부수뇌에 의해 연설과 기념관의 설립, 역사교과서의 기술 등으로 그 노력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명확하게 하는 탐색활동과 전쟁책임을 추궁했던 판결에 대해서는 독일 국민의 일부로부터는 반발의 소리도 있었고, 격렬한 대결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민 가운데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한 독일의 ‘어두운’ 역사의 측면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그 경향은 젊은 세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어떻습니까?

“민주제”를 지나서 나치가 생겨난 독일과 일본은 역사적인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양국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체험과

의 관계에서 일본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인 자신이 침략전쟁에 대하여 책임을 밝히려는 노력을 하였는가’라고.

예를 들면 생물병기를 개발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민간인의 생명을 빼앗았던 의사와 군인은 전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이웃나라에는 일본정부에 전쟁의 희생자로서 배상과 사죄를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글에서 독일과 일본의 경우가 다르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전쟁의 책임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이 과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돌아보고, 과거를 반성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독일에서 과거를 잊고 있는 젊은 세대의 경향을 강조하면서 ‘일본에서는 어떻습니까?’라고 반문하고 있는 부분은 필자의 의도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짓교출판의 『고교일본사 B』의 오키나와 관련 서술도 주목된다(217쪽 각주 7).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일안전보장조약 이후 일본은 오키나와와 오가사와라에 미군의 주둔 및 통치를 인정하게 되었는데, 이 사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살아남은 병사와 주민들이 미군이 지정된 캠프에 강제 수용되어 있다가 거주지로의 복귀가 허가되었지만, 군용지 접수로 인해 본래의 거주지로 돌아가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는 서술과 함께 오키나와에 대한 미국의 직접 통치가 ‘쇼와 천황’의 신헌법의 권한을 넘어선 행위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는 서술이 각주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일본 내에서 전쟁의 책임 문제를 ‘쇼와 천황’과 국민의 책임으로 보지 않고, 전쟁으로 몰고 갔던 군국주의자들에게 집중하는 현상과는 달리 ‘쇼와 천황’의 책임에 대한 문제를 교과서에 서술했다는 점은 매우 주목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1945년 이전 과거사 문제와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III. 한국전쟁 관련 서술의 특징

1. 다양한 관점

한국의 고등학교 근현대사 교과서는 총 6종의 검인정 교과서로 구성되어 있다. 서로 다른 출판사에서 다른 필자들에 의해 집필되지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고, 제시된 틀 안에서 집필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6종의 검인정 교과서는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틀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교과서가 담고 있는 시각의 편차가 결코 작지 않다. 각각의 교과서에는 보수적인 입장에서부터 진보적 입장, 그리고 중립적 입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각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시대와 분야에 따라 서로 다른 필자가 집필을 담당하기 때문에 한 교과서 안에서 다양한 시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박태균b, 2005).

일본의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역시 한국의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가 담고 있는 내용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각각 강조하는 역사적 사실이 다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의 냉전의 문제, 한국전쟁의 발발과 전개과정, 전쟁으로 인한 일본의 특수와 재군비, 그리고 전쟁 기간 중에 있었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일안전보장조약이 공통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역사적 사실들을 다루면서도 국가주의적인 관점이 강하게 드러나는 교과서도 있으며, 진보적이면서도 평화주의적 관점을 강조하는 교과서도 있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한국전쟁과 관련된 부분에서 특히 잘 드러나고 있다.

한국전쟁의 개전과 관련해서 북한의 전격적인 남침뿐만 아니라 전쟁 직전 남한 정부의 호전적인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산세이도와 짓쿄출판의 교과서들은 대체로 한국전쟁 기간에 이루어진 일본의 재군비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짓쿄출판의 『고교일본사 B: 신정판』가 오키나와의 문제와 함께 천황의 책임 문제를 지적한 부분과 도쿄서적의 『일본사 A: 현

대에서의 역사』에서 전후 보상 문제와 종군위안부 문제, 그리고 과거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 역시 진보적 관점에서 서술된 것으로 주목된다.

그러나 다이이치가쿠슈사의 『고등학교 개정판 일본사 A: 인간, 생활, 미래』, 야마카와출판사의 『개정판 일본사 A』와 『신일본사 개정판 일본사 B』는 샌프란시스코 회담으로 인해 타이완을 포함한 일부 영토를 포기하였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국가주의적 관점을 드러냈다. 또한 이 교과서들은 미일안전보장조약 이후에 일본의 방위비 부담과 미군에 대한 기지 공여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서술했다. 이러한 주장은 일본의 극단적인 우익세력들의 견해와 유사하다고 판단된다.¹⁵ 물론 이러한 관점이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관철되어 있다고 하기에는 객관적인 사실 서술이 많지만, 다른 교과서와 비교할 때 영토에 대한 서술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한편, 각각의 교과서에서 ‘칼럼’이나 ‘각주’를 두어 본문 이외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을 따로 서술하고 있는데, 각각의 교과서가 강조하는 부분들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점 역시 주목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문 외에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각각 ‘전쟁특수’, ‘맥아더와 원폭’, 오키나와, 과거사 청산 문제 등으로 모든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마다 서로 다른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일본의 검인정 교과서들이 한국의 검인정교과서보다 더 많은 서술의 자율성을 보장받으면서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과서가 한국의 완전한 독립을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이후로 보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한국에 대한 배상을 경제협력 자금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국가 정책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15. 주일미군 및 미일동맹에 대한 비판은 일본의 보수세력 중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시하라 신타로의 주장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 보수세력의 다양한 주장에 대해서는 박철희(2004)의 「일본 보수세력의 동아시아 인식」 참조.

2. 외인론(外因論) 중심의 서술

한국전쟁에 대한 서술에 대한 비중이 매우 작기 때문에 그 특징을 찾아내기 쉽지 않다. 전후 상황을 제외하고, 한국전쟁 자체에 대한 서술은 한 페이지가 되지 않는다. 적은 분량 내에 한국전쟁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실 — 남북한으로의 분단, 북한의 남침, 유엔군과 중국군의 참전, 발발 1년 후 38선 부근에서의 교착상태, 그리고 발발 3년 후 정전협정 — 만을 서술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일부 교과서에서 전쟁 발발의 배경의 하나로 남한의 불안정한 상황과 남북한 정부의 호전적인 발언 등을 다루고 있다.

일본 역사를 다루는 교과서인 만큼 한국전쟁과 관련된 서술은 전술한 바와 같이 대체로 일본 내 전쟁 특수 문제와 정치적 변동 — 레드 퍼지와 군국주의자들의 복귀 — 과 함께 경찰예비대의 창설을 통한 재군비 문제가 다루어졌다. 오히려 한국전쟁이 일어났던 시기의 서술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내용이 더 중요하게 서술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전쟁이 서술되고 있는 부분의 장·절의 제목이 각각 ‘민주화로 부터 경제부흥으로’,¹⁶ ‘미소 이극구조의 세계와 국내의 재편’,¹⁷ ‘일본은 어떻게 하여 독립을 회복하였는가?’,¹⁸ ‘경제부흥과 재군비’,¹⁹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와 안보체제’²⁰로 되어 있다. 단지 산세이도의 교과서만이 ‘대일정책의 전환과 조선전쟁’으로 한 절의 제목을 할애하고 있다.

이렇게 일본 고등학교의 검인정 교과서에 실린 한국전쟁과 관련된 내용이 일본 역사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서술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상당히 객관적으로 서술되었다는 점을 느낄 수 있다. 1949년 일본의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기 위해 실행된 ‘닷지 라인(Dodge Line)’이라는 초 긴축정

16. 『고등학교 개정판 일본사 A: 인간, 생활, 미래』, 다이이치가쿠슈샤.

17. 『일본사 A: 현대에서의 역사』, 도쿄서적.

18. 『고등학교 일본사 B: 100개의 테마에 의한 통사와 다각적 시점의 역사상』, 시미즈쇼인.

19. 『고교일본사 B: 신정판』, 짓교출판.

20. 『일본사B: 신정판』, 짓교출판.

책으로 인하여 일본 경제가 침체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한국전쟁이 경제부흥을 시작하는데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²¹

정치적으로도 한국전쟁이 진행되고 있었던 시기에 전범들이 활동을 재개하였고,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숙청이 이루어졌다는 부끄러운 과거도 숨기지 않고 있다. 아울러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일본 내에서의 반대가 있었다는 사실, 동남아에 대한 배상이 정치적으로 ‘검은 돈’을 만드는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점, 그리고 비록 한 교과서에서만 언급하고 있지만, 천황의 책임에 대한 언급 등은 당시의 상황을 정치적으로 한 쪽에 치우침 없이 객관적으로 전달하였기 때문에 서술이 가능했던 부분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 시기의 기술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은 일본 현대사의 주요 흐름을 외인론적으로 서술했다는 점이다. 조선전쟁에서부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일안전보장조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건들이 미국에 의해서 주도되었으며, 일본은 수동적으로 미국의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오키나와와 관련된 천황의 책임 문제를 거론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상황 전개는 미국에 의해서 주어진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전쟁 특수와 경우 주일미군이 한국에 파견됨으로 인해서 일본이 미군의 기지화가 되었으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전면적으로 체결되지 않은 것 역시 미국의 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었다. 미일안전보장조약과 주일미군의 주둔군 지위 협정 역시 불평등하게 체결된 것이었는데, 이것 역시 미국의 정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현대사의 기본적인 성격이 결정된 이 시기에 대한 교과서의 서술 속에는 ‘맥아더에 의해’, ‘미국에 의해’ 등의 용어가 수없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술들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여

21. 실상 ‘닷지 라인’은 한국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한국 역시 미군정 시기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미국은 한국정부에게 긴축정책을 실시할 것을 종용하였고, 일본의 닷지 라인을 모델로 해서 1950년 초 재정안정계획이 실행되었다(박태균d, 141-154).

지가 있다. 당시 일본이 패전국이었고, 미군정에 의해서 모든 정책이 결정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재군비에서부터 군국주의자들에 대한 사면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책 결정의 근본적인 책임이 미국에게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오키나와와 관련된 천황의 책임 문제가 거론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거나, 또는 미국의 정책을 특정한 방향으로 몰고 나가도록 했던 일본 내 보수 정치인들의 책임 역시 거론되어야 한다.²²

그 대표적인 예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대한 한국의 참여 문제였다.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참여하고자 했다. 미국 역시 한국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참여를 통해 유엔에서 ‘침략자’로 낙인찍힌 북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 정부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했다. 당시 주한미국 대사였던 무초는 ‘조선인부대가 중국군과 함께 일본에 대하여 전쟁을 벌였다. 조선인 게릴라가 만주에서 싸웠다. 조선인 부대로부터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았던 한국임시정부가 중국에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한국은 일본에 대한 교전국이었다’라고 하면서, ‘한국의 참가가 제외된다면 한국 정부의 위신은 실추될 것이며 한국을 지원하고 있는 미국과 국제연합의 자세가 후퇴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영국 정부와 함께 강화조약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영국 정부는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반대하였고, 결국 미국 측에 중국의 참가 문제를 뒤로 미루고 일본 정부에게 한국의 참여 문제 결정을 맡기자고 제안했다. 일본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회담 직전에 나온 문서에는 ‘만약 한국이 서명국이 된다면 100만 인의 재일조선인을 연합국민으로서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될 뿐 아니라 또 그들은 보상을 받을 권리를 취득하게 되어 일본은 난처한 지경에 빠지게 된다’고 일본 정부의 입

22. 이 문제는 한국의 분단 문제에 대한 한국 역사교과서들의 서술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한국의 역사교과서들은 한반도 분단의 원인을 외세의 분할 점령에만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 있지만, 이미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국내 정치세력들의 분열과 갈등 역시 분단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외인론적 설명이 역사적 사실을 반영한 것이지만, 이것만을 강조할 경우 역사 속에서 자기 성찰의 기회를 잃게 된다.

장을 밝혔다. 또 요시다 수상은 ‘재일조선인의 대다수가 공산주의자이다. 그들에게 조약의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것은 곤란하다. 조선인 전원을 송환하고 싶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이원덕, 1996: 26-38).

결국 중국 공산당 정부는 물론 한국 정부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참여할 수 없었다. 최종적인 결정은 미국 정부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이 과정에서 일본의 정치지도자들이 했던 역할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이들이 일본의 재군비와 군국주의자들에 대한 사면, 정치적 보수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공산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하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는 것 이미 밝혀져 있는 사실들이다.²³

이러한 점들을 감안한다면, 전후 일본 현대사의 초석을 놓았던 시기에 대한 서술은 반쪽만의 서술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밖으로부터의 압력에 의해서 앞으로의 운명이 결정된 어쩔 수밖에 없었던 선택이라고 서술하면서, 실상은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기도 하다.

IV. 글을 나오며

이상에서 일본의 고등학교 검인정 역사교과서에 실린 한국전쟁, 그리고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대한 서술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기실 그 내용이 많지 않지만,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가 일본 현대사의 초석을 놓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일부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전쟁 자체보다는 한국전쟁이 일본 현대사의 출발점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가 주요하게 언급되고 있다.

특히 한국전쟁과 관련해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전쟁 특수’에 대한 기술이었다. 한국전쟁은 일본이 경제적 침체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경제부흥을 하

23. 한국전쟁이 공산주의자들을 탄압하기 좋은 상황을 조성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일본의 보수적 정치인들이 했던 역할에 대한 설명도 전무하다.

는데 가장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으며, 일본 고등학교의 검인정 역사교과서들은 이 사실을 충실하게 서술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전쟁이 일본의 재군비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한국전쟁으로 인해 격화된 냉전체제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일안전보장조약으로 연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대한 서술은 교과서에 따라 일정한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 객관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본고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한국전쟁 시기 구 일본군 관계자들의 참전 문제에 대한 서술이 전혀 없는 것이 아쉬운 점이기도 하다. 예컨대 구 일본의 해군 관계자들이 동해상의 기뢰 제거 작업에 참여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점은 한국전쟁 자체를 조명하는데 있어서 그다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이 한국전쟁에 직접적인 관련자의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는 명기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검정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전쟁에 대한 서술은 전반적으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전쟁 개전 직전 남북한 간의 상호 호전적인 발언에 대한 언급을 비롯해서 전쟁 시 맥아더 장군의 무리한 전쟁 전략과 핵무기 사용의 문제, 전쟁 기간 동안 일본 내에서 발생했던 레드 퍼지와 불완전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대한 언급, 그리고 일본 천왕의 책임론에 이르기까지 교과서 간에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외인론적 시각이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일본의 검정 역사교과서에서 나타나는 결정적인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즉, 일본이 전후 보수화되고 재군비가 이루어진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외부, 즉 미국에게 돌리고 있다. 당시 패전국이었던 일본의 상황을 고려할 때 사실과 부합되는 설명이기도 하지만, 실상 일본의 정치적 구도를 보수적으로 이끌려고 했던 군국주의자들, 그리고 보수적인 정치인들의 역할과 책임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교과서의 집필자들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일본 현대사의 흐름에 대한 전반적인 왜곡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과거에 대한 성찰을 어렵게 하는 요소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문제는 역사교과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문제이다. 한국전쟁을 ‘조선전쟁’으로, 정전협정을 ‘휴전협정’으로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조선전쟁’은 일본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로 일반적으로는 ‘Korean War’, 한국어로는 ‘한국전쟁’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이라는 용어가 남한을 가리키는 용어이기 때문에 ‘한국전쟁’이 공정하거나 객관적인 용어라고 할 수 없지만, 과거와는 달리 현재 일본에서 ‘조선’이 북한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하는 용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조선전쟁’이라는 용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할 것이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연구자들이 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휴전협정’ 역시 ‘정전협정’으로 바뀌어야 한다. ‘휴전협정’은 정치적인 협의를 포함한 협정을 가리키기 때문에 1953년에 맺어진 협정을 ‘휴전협정’이라고 부를 수 없다. 한국에서도 이 협정을 ‘휴전협정’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정전협정’ 내에서는 협정 이후에 따로 정치협상을 벌일 것을 명시함으로써 이 협정이 철저하게 군사적인 성격의 협정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휴전협정’이라는 용어는 ‘정전협정’으로 바뀌어야 한다.²⁴

참고문헌

<자료>

- 『고교일본사 B: 신정판』. 実教出版(じっきょうしゅっぱん).
- 『일본사 B: 개정판』. 三省堂(さんせいどう).
- 『일본사 A: 개정판』. 三省堂(さんせいどう).
- 『신일본사 개정판 일본사 B』. 山川出版社(やまかわしゅっぱんしゃ).
- 『고교일본사: 일본사 B』. 山川出版社(やまかわしゅっぱんしゃ).
- 『개정판 일본사 A』. 山川出版社(やまかわしゅっぱんしゃ).
- 『고등학교 일본사 B: 100개의 테마에 의한 통사와 다각적 시점의 역사상』. 清水書院(しみずしょいん).
- 『일본사 A: 현대에서의 역사』. 東京書籍(とうきょうしょせき).

24. ‘휴전’이라는 용어를 ‘정전’으로 바꾸는 문제는 한국 역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휴전’이라는 말이 군사용어의 본래 의미와는 달리 ‘전쟁을 쉬고 있다’는 호전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는 만큼, 이 용어는 ‘정전’으로 바뀌어야 한다(박태균, 2005c).

- 『일본사 B: 신정판』. 実教出版(じっきょうしゅっぱん).
 『고교일본사 B』. 実教出版(じっきょうしゅっぱん).
 『개정판 일본사 A: 인간, 생활, 미래』. 第一學習社(だいいちがくしゅしゃ).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 편. 2002. 『한국 지성의 소리 1』. 역사비평사 참조.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한국 관련 내용 변화 분석 연구』.
 아시아 평화와 역사교육연대. 2005. 『2005년 검정통과 일본교과서 주제별 분석 자료집』.
 한국사연구단체협의회. 2005. 『일본 중학교 교과서의 역사서술과 역사인식』, 심포지엄
 자료집.

<연구성과>

- 김성보. 2002. 「한국, 일본 역사교과서의 현대사 서술 비교」. 『화해와 반성을 위한 동아시아 역사인식』. 역사비평사.
 박철희. 2004. 「일본 보수세력의 동아시아 인식」. 세종연구소 국가전략포럼 발표 논문.
 박태균. 2005a. 「한일회담시기 청구권 문제의 기원과 미국의 역할」. 『한국사연구』.
 박태균. 2005b.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내용에 대한 분석」. 『역사교육』 90호.
 박태균. 2005c. 「정전협정인가, 휴전협정인가」. 『역사비평』 겨울호.
 박태균. 2005d. 『한국전쟁: 끝나지 않은 전쟁, 끝나야 할 전쟁』. 책과함께.
 박태균. 2006. 『우방과 제국, 한미관계의 두 신화』. 창비.
 부르스 커밍스 저. 김주환 옮김. 1986. 『한국전쟁의 기원』(상)(하). 청사.
 서중석. 1995. 「이승만과 북진통일론」. 『역사비평』 여름호. pp. 108-164.
 서중석. 1996.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2』. 역사비평사.
 와다 하루키. 1999. 『한국전쟁』, 창작과비평사.
 이원덕. 1996.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 서울대학교출판부.
 임대식 외. 2002. 「집중토론: 한국역사학, 역사교육의 쟁점」. 『역사비평』 2001년 가을호.
 金森久雄. 2007. 「戦後の経済論争」. 第50回「日経・経済図書文化賞」記念によせて, [www.jcer.or.jp/bunka/pdf/bunkatokushu5\(071105\).pdf](http://www.jcer.or.jp/bunka/pdf/bunkatokushu5(071105).pdf)

Japan's Interpretation of the Korean War:

Focusing on Japanese History Textbooks

Park, Tae Gyun
 Assistant Professor, GSIS, SNU

The dispute on Japanese history textbook has been ignited not only in Japan, but

in Korea and China since 2001 when Fusosha published a new history textbook which contained distorted historical facts and evaluation. However, objective examination on all of Japanese history textbooks has never been carried out because the dispute was solely focused on the textbook published by Fusosha. Even Korean intellectuals and mass media have paid attention only to issues related to the Korean-Japanese relationship.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description of the Korean War in 11 different Japanese history textbooks. There are diverse narratives on effects of the Korean War in Japan, whereas explanation of the war itself is dealt with in comparatively small amount. Although historiography depends on authors of the textbooks, they commonly deal with the special economic demand triggered by the Korean War, remilitarization of Japan and the 'Red Purge' during the Korean War period, and the San Francisco Peace Conference in 1951. Moreover, the responsibility of Japanese Tenno who allowed America to use Okinawa as a military base and introspection of Japan's war crime is depicted by two history textbooks.

In general, it is possible to evaluate the narration in Japanese history textbooks as being comparatively objective. However, there is a problem that almost all depictions are based on exogenous historiography, which stresses external factor more than internal ones. Accordingly, the main cause of problematic issues and policies were described as being created by the US occupation policy between 1945 and 1951. Though it is not possible to ignore the US' role in the postwar era, cooperation between initiatives taken by the Japanese conservative politicians is not free from responsibility to the retrogressive policies in post 1945 period. Under this historiography, history would not give any lesson for the future.

Key Words: Japanese history textbook, Korean War, San Francisco Peace Conference, Remilitarization of Japan, Red Purge, Fusosha

